

‘제로페이 무용론’에 박원순 “신용카드 40년 걸렸다”

(서울시장)

서울시 국감

박 시장 “제로페이 1년도 안돼 갓난아이한테 뛰라고 하는 말” 교통공사 채용비리도 재점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박원순 시장을 집중 공격했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감사 결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 유착 의혹 ▲마곡지구 개발 사업 문제점 ▲제로페이 사용 실적 저조 등을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조직적인 채용비리나 고용비리는 없었다는 게 확인됐다”며 “감사 과정에서 일부 저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비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다만 감사원이 지적한 4가지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 주장이 더 일리가 있다”며 “감사원에 재의 절차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 있어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려고 재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는 감사원 지적 사항 중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 부적절 및 일반직 전환 업무 부당 처리, 7급보의 7급 승진시험 추가 실시 합의 및 시험 관리 부적절,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등 용역의 직고용 전환 업무 부당 처리, 특수차 운전 분야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 4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무소속 정인화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시는 채용비리가 없었다고 하는데 4가지 사안은 위법 내지 부당한 부분이 있다”며 “잘못된 점을 시인하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시장은 “특수차 운전 분야에서

부당채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는데 여기서는 감사원의 오류가 있었다”며 “철도차량 운전업무 부분은 단순히 운전뿐만이 아닌 운전을 보조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운전면허가 없어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의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코링크PE와 투자자문 계약을 맺은 피앤피플러스(PNP) 컨소시엄이 2017년 9월 1500억원 규모의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원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초 계약 조건대로 면허 취득도 하지 않고 일

정이 3개월 이상 지연됐는데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며 “지나친 특혜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실시도면 제출, 투자금 확보, 면허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항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시장 측근들이 마곡 지구에서 각종 사업을 따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용연 서울시의원이 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데 마곡지구 입찰 자료를 모조리 요구했다”며 “토지내용별도 1~3순위 입찰 금액, 낙찰차액 등 입찰 관련 자료를 요구한 직후 작년 12월 자신이 이사로 부인이 대표인 건설사 명의로 마곡지구 토지입찰 일괄 군데에 참여해 4개를 낙찰받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4건 중 2건은 중도금을 갚지 못해 계약 해지 직전이다. 능력도 안되는 업체가 무리하게 낙찰받았다는 것 아니겠냐”며 “현역 의원이 직무를 남용했다. 서울시는 공직 기강 차원에서 SH공사를 감사하고 김용원 의원에 대해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박 시장은 “부지 낙찰은 SH공사의 경쟁 입찰을 거쳐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도 공개입찰경쟁을 거쳐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덧붙였다.

무소속 이연주 의원은 제로페이에서 서울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제로페이에 시민의 혈세와 서울시 공무원들의 노력, 각종 인프라가 투입됐는데도 작년 말까지 누적 결재액이 317억원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결제 사업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여기에 끼어들어 공공의 권력을 이용해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서울시 때문에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제로페이는 민간결제업자가 운영하는 제도고 시는 시스템이 깔리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신용카드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가 40년 동안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결제 방식이 신용카드에서 QR코드로 바뀌고 있고 필연적으로 이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제로페이는 시작한 지 일년도 안됐다. 신용카드도 40년 걸렸다. (실적이 낮다고 지적하는 건) 갓난아이한테 뛰라고 하는 말”이라고 받아쳤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일몰 위기 도시공원 보전한다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상 57%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선정

서울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57.3%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토지주가 공원으로 묶여 있던 땅을 개발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사유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근거가 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시 서울의 도시공원 중 사유지 약 38.1㎢가 사라진다.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기존 11.3㎡에서 7.6㎡로 줄어든다. 세계

보건기구 권고기준인 9.0㎡보다 1.4㎡ 적다.

시는 “시민 휴식처가 사라지고 공원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17.2㎢ 중 57.3%인 67.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휴양림, 수목원을 설치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등 시장 허가를 받는 경우는 가능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이미 조성된 공원 등 약 25.3㎢는 도시계획시설로 존치된다. 기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한 체육시설, 생산녹지, 대상녹지, 벽운유원지,

학교 등 5개소 약 0.35㎢도 이번엔 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15일부터 2주일간 주민 열람 및 관계부서 의견을 조율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시는 2018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약 1조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사들여 공원으로 보존하는 내용이다.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지난해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김현정 기자



붉게 물든 가을

14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갯골생태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붉게 물든 칠면초 사이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잠실주경기장서 ‘전국장애인체전’ 개최식

서울시는 15일 오후 5시30분 잠실종합경기장에서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식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개회식 메인공연은 ‘뛰는 심장.소리.너머’를 주제로 개최된다.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를 모티브로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뛰는 심장의 열정을 표현할 예정이다. 일반관람석은 1만여석으로 오후 3시부터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연구원 ‘시민 위한 플랫폼 경제’ 세미나

서울연구원은 1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경제, 시민을 위한 서울의 과제?’를 주제로 개원 27주년 기념 세미나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세미나는 ▲강홍빈 서울연구원 이사장의 개회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시장의 축사 ▲저스틴 킨츠 미국 우버 정책담당 부사장의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우버의 저스틴 킨츠 부사장이 ‘미래

도시교통으로 바라본 플랫폼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후 ‘모빌리티 플랫폼과 서울의 미래 교통’, ‘공간공유 플랫폼으로서 공유오피스의 가능성과 과제’,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서울의 역할’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손상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서울의 과제’를 정리해 보는 종합토론을 벌인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결산보고서’, 우수 지자체 선정

경기도가 ‘2019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공모전’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 및 ‘우수기관 인증패’를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광역자치단체 부문과 기초자치단체 부문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총 39개(광역 17개, 기초 22개)자치단체가 참가했다.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가한 광역단체부문에서 서울, 인천, 대전, 전북 등과 함께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도는 방대한 분량, 어려운 회계 용어, 복잡한 구성 등 획일화된 기존 결산

서의 틀에서 탈피해 복잡한 설명을 최소화하고 시각화 데이터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핵심적인 결산정보 및 도민 관심 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2018년 경기도 결산정보’를 제작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카드뉴스 형태의 영상콘텐츠를 제작,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함으로써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알기 쉬운 2018년 경기도 결산정보가 도민 여러분의 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